

‘신자유경제주의’와 건축

Architecture and ‘Neoliberal Economic Theory’



오 동 옥 | Oh, Dong-uk, KIRA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 약력**
- 경희대학교 건축과 졸업
 - 청석 건축사사무소 대표
 - 국토해양부 민원제도개선분야 자문위원
 - 서울지방항공청 설계분야 자문위원
 - 소방방재청 중앙안전점검단
 - 적법성검토시스템(U-세움티) 구축사업 1, 2차연구 외 다수

2011년도를 마감하는 시절에 대한민국 건축계의 현실은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매년 그러 하였지만...

‘신자유경제주의’

작금의 경제 정책기조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단어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가치 있는 단어인 ‘정의’, ‘공동체’라는 존재를 무심하게 만든다. 또한 IMF와 2008년 리먼사태이후 우리의 금융시스템(국내은행, 저축은행, 카드업계)은 선진화라는 미목하에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탐욕으로 수수료장사, 중소기업대출외면, 예대마진의 폭리 등으로 서민의 창구가 아니라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현 금융시스템의 부도덕한 극치를 보고 있다.

국민을 양극화시키고, 다수 위에서 지배하고 온갖 특혜를 가지는 소수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정책들,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국민들에 회복할 수 없는 극한으로 몰고 간다. 그리하여 작금의 상황은 중산층의 붕괴 및 1%와 99%라는 극단적 용어들이 등장하고 1%가 99%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반 월가시위는 이러한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기 곤란한 업무(보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적내용을 수반하는)들 가운데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안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정부부처 산하에 직접적으로 이를 대행하기 위한 전문가제도를 둔다. 이가 곧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다. 이 전문가자격자들은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당해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들이다. 건축분야는 타분야와 달리 5년제 졸업 및 사회적인 실무경험을 쌓은 이후에 시험이라는 제도에 응시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취급함에 있어 그 만큼의 중요한 분야란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축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발전시기에 건설위주의 정책으로 건축사들은 국가 건축 정책의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내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건축사=건축 인·허가 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에는 대 다수 건축사(국가공인전문

자격자)들이 먹고사는 것도 힘든 중간이하의 계층으로 전락하였다.

그럼 정부는 이러한 희생을 한 건축사들에게 어떻게 하였나?

여전한 건설위주의 정책으로 IMF이후 대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놓고 재건축, 재개발 및 택지공급 등 전 국토를 아파트 과다공급으로 인한 폐해로서 대한민국의 주거건축은 아파트로만 회자된다. 또한 분양(공급)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가의 분양가 및 과다공급으로 미분양 속출 등 폐해로 귀결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편의라는 핑계로 과도한 건축사의 배출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으며 WTO이후 국제 경쟁력강화의 명목으로 국내건축계를 이분화 하였고 업무량은 증대하였으나 보수는 하향화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공적업무를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평균건축사들의 연 소득은 10년정도 아래인 일반기업의 과·차장급의 2/3이하수준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향후 이 나라의 건축계 미래는 암울한 뿐이다.

최근의 신용평가제의 도입 또한 심각하다. 젊은 신진건축사들의 기회의 원천박탈로 헌법에서의 ‘기회평등의 원칙’에서 정부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 우리는 어떠한가?

‘건축이 공공이고 국가의 자산이요, 우리시대의 사상의 집약체’란 의미와 상관없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일조하지 않았던가? 국가 전문가자격자로서 아닌 건축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폐해 및 패배의식에 젖어 그냥 죽어가는 것인가?

협회는 정부의 정책에 고민을 하는가? 여러 건축단체들 속에서 우리협회의 정책이나 목소리는 무엇인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협회의 정체성은 과연 있는가?

무한경쟁 경제자유시대의 우리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가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책임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